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계급투쟁

김민정*

이 글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논의되고 있는 공정한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의 내용과 문재인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를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2022년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경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논의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실의 문제이다. 이 점에 착안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전환의 핵심을 파악한 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노동조합과 개혁 성향의 언론 등이 주장한 정의로운 전환의 특징 및 한계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각 주체별로 제시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다양한 내용을 정치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가를 사회운동론의 차원에서 제안한다.

주제어: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전환, 계급투쟁

1. 문제제기

2021년 3월 문재인은 보령1·2호기 화력발전소를 방문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언급했다.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강사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을 시작할 것입니다. … 충남은 단지 경제와 환경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품는 포용적 성장을 지향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보답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존의 석탄발전 등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 전환은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고 아무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는 충남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수소 경제를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에 함께 하겠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그의 약속은 지켜졌을까? 석탄화력 발전소 방문 7개월 후인 10월 15일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노동자가 자살을 했다. 정부와 기업은 2028년까지 삼천포화력발전소 6호기의 폐쇄를 결정했지만 그들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 및 생계유지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노동자가 일과 이직 준비를 위한 공부를 병행했지만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 사전에 이러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 노동조합과 일부 기후 활동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폐쇄가 사회적으로 논의되기 전부터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¹⁾)을 요구했다. 정의로운 전환은 고용과 환경 간의 대립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방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의 현실적 필요성에서 나온 정치적 고안물이다. 환경 보호와 고용 보장의 상생 해

¹⁾ ‘transformation’은 전환(轉換), ‘transition’은 천이(遷移) 혹은 전이(轉移)로 번역하여 두 개념의 차이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전환’이라는 용어에는 급격한 변화를 의미하는 ‘transformation’과 점진적 이행을 의미하는 ‘transition’이 모두 포함된다(이상현 2020, 90).

법은 이미 1970년대 미국 노동운동 내에서 제시했다.

이 글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논의되고 있는 공정한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의 내용과 문제인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를 살펴본다.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국외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의 영향 및 의미를 도출하거나(남재욱 외 2021; 정홍준·김주희·채준호, 2021 등) 국내 사례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방향(정의로운전환연구단 2022 등)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와 달리 이 글은 2022년 한국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경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논의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실의 문제이다. 이 점에 착안해서 문제인 정부의 공정한 전환의 핵심을 파악한 후 문제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노동조합과 개혁 성향의 언론 등이 주장한 정의로운 전환의 특징 및 한계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각 주체별로 제시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다양한 내용을 정치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가를 사회운동론의 차원에서 제안한다.

2. 문제인 정부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인 정부는 ‘공정한 전환’이라는 표현을 공식 문서에서 사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2020.12.10)에서는 ‘공정한 노동전환’이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큰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공정한 전환’은 공정한 노동전환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뿐 아니

라 피해를 입는 기업과 지역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다.

2021년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전환 및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제시한 ‘공정한 전환’과 법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은 산업 전환의 사후적 방안으로 예상되는 피해 기업과 지역 및 예상 실업자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2022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노동 전환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산업 전환으로 노동수요의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발전 부문의 경우 전력화에 따른 전력의 수요증가는 전력산업 및 관련 산업의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발전 방식의 변화에 따른 전환 부문 내에 노동수요 전환은 서로 상쇄 작용을 한다. 발전 방식의 변화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수요는 감소하겠지만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고용증가는 화력발전의 고용감소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다.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고, 대중교통, 개인 모빌리티, 공유차량의 이용 확대 등으로 승용차 통행량이 감축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수송 부문 자체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자동차 제조업 및 관련 산업의 고용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방식의 변경은 노동수요를 줄이는 쪽과 증가시키는 쪽을 동시에 야기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수요를 줄이게 될 것이다.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위한 노동수요는 줄어들고 전기·전자 장치와 설비 생산을 위한 노동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엔진부품, 동력전달장치, 전기장치 관련 종사자는 부정적 영향을 심각하게 입겠지만, 각종 전장(電裝)이나 배터리와 같은 미래차 관련 부품 종사자의 긍정적 효과는 불확실하다. 미래차 부품이나 자율주행 등에 상당한 노동수요 증가 가능성은 있겠지만, 부정적 영향에 비해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철강 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는 에너지 사용방식과 제품의 생산방식, 제품에 대한 수요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지만 2050년까지는 상당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철강 산업에서는 2030년까지는 일부 신·증설 설비를 전기로로 설치하고 2040년과 2050년 사이에 기존의 설비를 수소환원 설비로 교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2040년 이후에는 노동수요에 상당한 불확실성과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철강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받게 된다.

시멘트 산업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비중의 연료 및 재료가 변경됨에 따라 일부 설비의 교체가 불가피하겠지만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는다. 에너지가격

의 상승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지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부문의 경우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열효율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또는 고효율기기로 교체 등 생산방식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는 대규모의 광범위한 사회적 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산업 전환에 있어서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낙관적인 예측에 기초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전반적인 고용 영향보다는 부문별 고용 영향의 차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고 그에 대한 지원 방안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이다. 또한 정부는 부문별 노동수요에 대한 예측을 강조하지만 실직에 처한(할) 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 보장과 생계유지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경사노위의 보고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공정한 전환의 주요 기조는 2021년 7월 22일에 한국판 뉴딜 2.0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사업재편·전환 승인 기업에는 인사·노무관리, 산업안전 등 노사협력 컨설팅을 지원한다. 노사 간 협약을 통해 직무 전환·고용유지 등의 조치를 하면 고용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고용안정 협약지원금’을 신설한다. 인력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전직이나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직 예정자가 근로시간 단축, 기업 자체 전직 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재직 중 미리 전직 준비를 하도록 지원한다.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직예정자에게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중장년 재취업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된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을 확대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석탄화력발전 분야 기업 이직자가 생계비 부담없이 훈련을 받도록 연 1%의 저금리 생계비 대부도 지원한다. 가구원 합산 연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면 월 200만 원, 1인당 20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재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이러한 규정은 ‘공정한 전환’을 전환 과정의 절차 및 사후적 보상 문제로 국한하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지원책은 기업을 통한 고용 지원이고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저금리 생계비 지원뿐이다. 이에 대해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재교육 우선이 아닌 ‘선고용 후재교육’을 요구한다. 사회복지가 열악한 사회에서 ‘해고는 살인’인 것처럼 체감하는 노동자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 및 치료도 필요하다. 또한 산업구조 차원에서는 공공재생에너지발전과 민영화된 석탄화력 재공영화, 즉 발전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가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산업재해 예방, 고용 보장, 임금 인상 등과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다. 법 및 행정 차원에서는 ‘에너지전환지원법’과 강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한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책을 확실하게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²⁾

²⁾ 금속노조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공정한 노동전환’으로 개념을 축소했다”면서, “노동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등을 실현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작 정부는

김종진(2021)은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정책 방향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표-1> 참조).

<표-1> 정의로운 전환 관련 주요 노동시장 정책 방향과 과제

구분		법 제도	방식	주요 정책
영역	중앙정부	탄소중립기본법 하위 법률 개정	노사정 각 주체 사회적 논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연동 산업 및 노동전환 방향 전환 추진 정책 수립
	산업· 지역	각 영역 협약 자치법규· 조례	산별·지역별 교섭 협약	
	기업	단체협약	전환 대책 수립	
의제	적극적 시장	고용정책 직업능력향상 고용보험 근로복지 노사관계 사회보장	관련 법률 정책 수립 각 위원회 노조 추천 위원 의견 제시	가. 전환 노동시간 단축 장시간 48시간 이하 감축 32/35시간 노동 모델(전환 시 통상 15% 인력충원 필요→ 비정규·하청 전환 포함 가능 나. 전직 재취업 지원 저임금 노동자 해소(생활임금 일자리로의 다른 전환) 실업급여(9개월)+ 전환 기금(9개월) 일터 전환 지원
	직업능력 숙련형성			전환 지원 역량 강화 1년 6개월 숙련형성 교육훈련(노동전환센터+업 종·지역결합)

‘노동전환’ 대책에만 집중하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한 전환의 방안이 실직자의 최소한의 지원책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 제목이 ‘지원 방안’이라는 것은 정부가 제3자의 위치로 비켜서 있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정의로운 전환을 책임질 주체인데도 우리 정부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한다. 또한 급속노조는 일자리 보호를 강제할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게 아닌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전직 지원에 맞춰져 있는 점, 입학청 전속관계 속 2~3차 하청업체에게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 외부 완성차업체의 미래차 전환에도 실효적이지 않다는 점을 비판한다(손광모 2021.07.22.).

				전환 이전 유급 학습휴가제(최소 3개월)
	산업안전 보건			전환 과정에서 노동안전 정비 전환 과정에서 직원 스트레스 해소 전환 과정과 이후 작업장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보호 안전망			저임금 노동자 지원 고용, 산재, 건강 등 사회보험 지원 사회보장과 고용보장 체계의 보편적 · 포괄성 추진

출처: 김종진. 2021. “기후위기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한 규칙과 노동시장 현황”. 『KLSL ISSUE PAPER』 제158호.

<표-1>은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산업 전환이 노동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산업 전환을 둘러싼 국가 및 기업과 노동조합 및 노동자 간의 세력 양상에 따라 정책의 내용과 방향이 주요하게 결정된다. 김종진(2021)은 각 주체 간 논의 방식을 협상 및 대화를 중심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진행된 산업 구조조정 대표적으로는 쌍용자동차 구조조정과 조선업 구조조정에서 나타난 직접 행동 즉, 투쟁 및 공장 점거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법과 제도에서 어떻게 반영되거나 영향을 끼치는 가에 대한 고민이 적어 보인다. 산업 전환에서는 고용 유지, 직업 훈련, 고용보험, 근로복지, 사회보장 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재정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서 사측과 노동자 측이 대립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자본계급은 지원 및 양보보다는 노동계급에게 재정을 전가하거나 고통을 감내하라는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양측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자본의 이해와 노동의 이해가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자본주의에서 직접 행동은 그 양상의 규모와 질과 무관하게 피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가치는 노동자가 생산하고 이에 대한 분배는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이윤으로 구분되는 사회에서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의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물질적 토대에 기초한다. 이 상황에서 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세력관계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가 자본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구조적인 상호의존' 관계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 지원책에서 핵심은 어느 계급이 피해 지원금을 지불하느냐이다.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마련했다.³⁾ 이 기금의 주요한 출처는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이다. 이는 법인세와 부유세 등의 신설을 통한 기금 마련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기금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며, 기후위기의 가해자인 기업과 부자들의

3) 「탄소중립기본법」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기금을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71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입, 8.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쓰인다. 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운영,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용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홍보,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1.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한 ‘국민께 드리는 약속’ 중에는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는 항목이 있다. 이 내용 중에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 유리한 상황을 형성하는 것으로 기후 불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기후대응 기금의 일부만이 노동자 지원에 쓰인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보호는 여러 항목 중 하나이다.

2022년 정의로운 전환 기금 관련 정부 예산은 160억 정도이다. 이는 고용보험(노동전환 지원금 53억 원)과 기후기금(산업전환 고용안전 협약 지원금 50억 원, 노동전환 분석센터 11억 원, 노동전환 지원센터 46억 원)으로 구분된다. 기후 관련 예산은 107억 원으로 지원분석 센터 예산 57억 원을 제외하면 50억 원이다. 그밖에 기존 사업을 활용한 정책 사업과 예산은 유급휴가 훈련 360억 원(1만 명),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951억 원(2.5만 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200억 원(20개소) 등이 있다(김종진 2021). 1조 원도 되지 않은 전환 기금에서 실질적인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과 생계유지 비용은 적다.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 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폐지되는 석탄화력 발전소 30기 인원 모두가 직무 전환(일자리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대 7,935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7,935명 중 정규직인 발전본부 소속 노동자는 2,625명, 비정규직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는 5,310명이다. 또한 LNG 발전의 특성상 석탄 발전소만큼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전환을 가정했을 때, 전환 불가인원은 4,911명이다. 이러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예상 해고 상황과 더불어 자동차산업의 40만 명 노동자 중에서 엔진부품, 동력전달장치,

전기장치 관련 노동자의 인원 감축을 고려다면 노동자를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

지방 정부의 경우,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보령시의 경우에는 지역 내 위기 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전직 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전직 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은 충남 고용 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하나로 석탄발전소 폐쇄 및 자동차부품 산업의 고용여건 악화로 인한 이·전직 노동자의 취업 의지 및 장기근속을 높이기 위한 노동자 생활 안정지원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협력사 퇴직 노동자) 또는 자동차 관련 산업(금속, 제철, 부품, 기계, 소재, 전기 등) 퇴직 노동자로 2021년 4월 26일부터 9월 10일 이전까지 취업해 현재 근무 중인 노동자로 신청 접수 후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서 서류검토를 통해 선정되면 이·전직 촉진 장려금을 1인당 1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자 개인이 처한 환경을 고려한다고 해도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기에는 이 지원금은 부족한 액수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예상 실직 노동자가 지원 대상자가 아닐 뿐 아니라 신청 대상자라도 서류 심사를 거치게 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정부 방침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재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 전환의 목표는 이윤을 회복을 위해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의 생산성 및 경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는 이윤 경쟁력이 낮은 사업을 쉽게 축소 및 정리해서 수익이 나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산업 구조조정의 적극 지원이며,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인민의 희생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직 위기에 처한 노동자의 자살이 그 단적인 예이다. 그래서 노동계급은 '정의로운'이 강조된 전환을 요구한다. 그리고 국가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해고에 처할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계급적으로 기울어진 권력 구조 속에서 노동계급이 최소한 요구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시된 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 요구의 출발점이다.

생산과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처지에서 국가를 대상으로 정의로운 전환 요구는 필요하다. 이 때 핵심 요구는 노동자를 위한 대형 기금 조성이다. 이러한 점은 정의로운 전환을 처음으로 제시한 미국의 노동운동에서도 발견된다. “정의로운 전환은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석유화학원자력노동자국제조합(OCAW)’에서 토니 마조치(Tony Mazzocchi) 집행부 시절 노동운동의 지도 원리로 등장했다. 이 노조는 노동-환경운동을 창출하는 선구적 역할을 했다. 마조치는 노동자들이 항상 듣게 되는 “일자리 협박”, 즉 노동자들이 환경조치들을 지지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을 우회할 방도를 찾고자 했다. **일자리 협박에 대한 대응으로 그는 정의로운 전환이란 생각을 대중화하는 데 일조했고, “노동자들을 위한 대형기금”을 제안했다.**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환경적 전환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을 뜻했다. 여기에는 노동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고등교육 기회 등을 포함했다. 마조치의 말에 따르면, “**오물에 대한 대형기금이 존재한다. 노동자에게도 그런 기금이 하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를 위한 대형기금을 형성하려는 모든 노력은 (기업을 위한 대형기금과는 달리) 지배적인 자본가 이해집단에 의해 곳곳에서 봉쇄당했다”(Foster, John Bellamy 2019, 강조 인용자).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에서 핵심이자 쟁점은 전환 대상 기업에서 실직 위기에 처한(할) 노동자의 ‘보호’이다. 이 ‘보호’ 수준을 둘러싸고 정부의 지원 사업과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요구가 경합하고 있는 계급투쟁의 장이 형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을 적극적

으로 주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후위기의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기업의 요구이다. 2019년 현대차노조는 전기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엔진과 변속기 등 소재 사업부 인원이 6,341명에서 2025년 3,618명, 2030년에는 1,119명까지 축소된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노동자를 해고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2021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9차 사업 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기업활력촉진법(일명 원샷법)에 따라 이들 기업은 세제 감면이나 절차 간소화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재편이 승인된 16개사는 향후 5년간 미래차와 유망 신산업 분야에 총 4000억 원 투자와 1200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을 밝혔지만 내연기관차 관련 업종에서 해고가 되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공정 축소에 따른 인력 조정 압력이 커졌지만 현재는 노조의 동의 없는 구조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 전환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정부에게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시 말하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전환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담아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또한 고용 보조금을 확대해 업체의 고용 부담을 덜고 탄력적 근로가 가능하도록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주의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 문서에 공정한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책의 후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계급투쟁의 관점에서는 이 현상이 후퇴라고만은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공정한 전환이 체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이 후퇴할

것도 없었다. 발전 비정규 노동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노동자들은 빈 수레가 요란한 문제인식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의로운 전환의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기층의 노동계급 사이로 확장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쟁점이 표면화되지 않았다.

3. 정의로운 전환의 유형

“정의로운 전환은 종종 상이한, 그리고 경합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과 집단에 의해 다중적이고 상충적인 방식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다”(스넬, 다린 · 페어브러더, 피터 2019, 268).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의미가 부여되지만 이 개념의 공유 지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사회 및 정책 전환에 있어서 특정 집단에게 일방적으로 비용과 고통이 전가되는 방식은 안 된다는 공평성의 기본 원칙이다.

Just Transition Research Collaborative(2018)를 비롯한 이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로 현상유지(Status Quo) 정의로운 전환이다. 이는 기후위기와 사회 · 경제적 불평등을 발생 및 심화시키는 정치경제체제를 유지한 채 대기업에 세금감면, 규제 완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탄소배출 저감과 녹색화를 유도하는 시장 기반, 기업 중심 탈탄소화 추진 등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그 과정에서 실직하게 되는 화석연료 산업 노동자에 대한 보상과 새로운 고용 기회의 제공 차원으로 축소된다. 두 번째로 관리형 개혁(Managerial Reform) 정의로운 전환이다. 이는 현상유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과 마찬가지로 지배적인 경제 논리와 권력

관계에 도전하지 않고 정치경제체제의 개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일부 산업·환경·노동 등 분야의 관리 규칙과 규제 기준을 개정 및 강화하거나 새롭게 도입하여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 확대를 지원하거나 작업장 안전 및 건강 조건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정치경제적 질서 내에서 지속가능성, 공평과 정의를 제고(국제노동총, ILO 등)한다. 특히 노동권의 보장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협의회 등을 제시한다.

세 번째는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 정의로운 전환이다. 이는 피해를 입게 될 노동자의 보상이라는 제한적인 분배적 정의의 요구 그리고 시장 기반 및 기술적 접근을 넘어 정치경제체제의 구조적 개혁 추구한다. 노동자와 공동체가 탈탄소화 전환 의사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에너지 등 주요 부문의 공적·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배적인 정치·경제적 권력관계에 도전하고 이를 변화해야 한다(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 등). 네 번째는 변혁적(Transformative) 정의로운 전환이다. 이는 '구조개혁 정의로운 전환'과 유사하나 이윤과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가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발생 및 심화시키고 있어서 체제 내 개량이 아닌 체제변화가 필요함을 더욱 강조하고 성장주의 비판과 기존 사회-생태적 관계의 재구성, 그리고 계급적 억압 외의 인종주의 및 가부장제 등 억압적 구조 타파 등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입장이다(Climate Justice Alliance, Just Transition Alliance, Labor Network for Sustainability 등).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의 이상형(ideal type)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세 가지 판본(version)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기득권층의 판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 전환'은 재벌·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전환을 설계 및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현상유지 정의로운 전환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관리개혁적인 정의로운 전환의 모습을 띤다. 이 점에서 국민의힘 등과 같은 우파 진영과는 현상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듯 한 효과를 낳는다. 일부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이 민주당에 기댄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이라는 정치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의 개혁성에 대한 희망의 표현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본의 이해관계와 구조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두 번째로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의 판본이다. 노동조합 판본으로 대표적으로 금속노조의 안이 있다. 금속노조는 2021년 3월 2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1년 통일요구안 산업전환협약 쟁취'를 확정했다. 이는 노동을 포함한 사회경제 주체들이 산업전환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대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를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선정해서 노조법 등 법 제도 개선으로 노동자들이 산업전환 과정에 집단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금속노조는 2021년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공동결정제 10만 청원을 통해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이라는 기조로 정부와 국회에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제정'을 요구했다. 공동결정법은 전국 · 산업 · 업종 · 지역에서 산업전환을 논의할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설치와 작업장 민주주의를 위한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이다.

2019년 8월 26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세부적인 요구안 다섯 가지를 정리했는데, 정의로운 전환과 이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정부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
-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더 큰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정의로우며 합리적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지켜야 한다.
 - 정부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다배출자에게 더욱 많은 감축(비용) 책임을 배분하고, 빈곤층과 소농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피해는 보상하고 예방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기의 불평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기후정의 원칙).
 - 화석연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지역 사회가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받은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 전환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기술공학적 해결책의 도입과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핵발전의 이용을 정당화(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5.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설치하라.
- 현재 정부의 각 부처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기후위기를 외면하고 있으며, 청와대와 국회는 개발주의 시대의 낡은 국민 여론에 매달려 기후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범국가기구로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름과 다르게, 미세먼지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
 -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개방적이며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설치하라. 이 기구를 통해서 2050 배출제로 목표 실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와 기존 계획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라.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핵심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현재 산업 전환 논의에서 배제되거나 과소 대표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민주적 참여이고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국가 기구 및 법 제도의 구축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금속노동조합은 구조개혁을 목표로 한 관리 개혁적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이들이 제시한 관리 개혁적 정의로운 전환의 요구는 일부 민주당의 개혁성과 접점이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의 개혁성에 따라 이들 집단의 일부는 민주당과 협의 및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의 노사협조주의와 노정 및 노사정협의회에 제안에 일부 노동조합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모습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2020년 7월 대통령 문재인이 “민주노총은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했지만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부결시켰다. 민주노총 대의원의 찬반투표에는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참여해 찬성 499명, 반대 805명, 무효 7명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급진적 판본으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사회 전환을 형성, 생산수단의 사회적 통제, 생산관계의 변혁, 국가 권력의 노동계급 장악 등을 획득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이 입장을 지닌 세력은 미약하다. 하지만 최근 급진적 기후운동의 결집은 변혁적인 정의로운 전환 가능성의 희망을 보여준다.

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을 비판한 일부 기후활동가들은 2022년 4월 28일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을 만들었다. 그들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은 다음과 같다.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에서 시작하자

기후정의동맹이 주요 사업으로 결정한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 투쟁’은 기후정의의 전망과 대안을 통해 조직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싸움의 현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석탄을 통해 탄소를 줄이겠다고며 노동자 해고와 민간자본의 재생에너지 시장 진입을 독려했다. 이러한 기조는 원전

을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기후/생태위기 이후 사회의 근본적 변화, 체제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될 정도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수천 명의 노동자 해고를 예고하고 있다. 석탄발전소 폐쇄 문제는 정의로운 전환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될지 가능하게 될 시험대가 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전환이라며 전국을 전쟁터로 만들며 이루어지는 태양광/풍력 발전, 송전선로/송전탑 건설과 신규 석탄/LNG 발전소 건설은 모두 민간자본에게 에너지 시장을 개방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에 맞서 싸워온 지역 주민들의 투쟁은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당하거나 지역의 고립된 요구로만 이해되어 오기도 했다. 오히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정당한 사회적 요구로 발전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조직되어야 한다. 기후정의동맹은 이를 공공적, 민주적, 생태적 에너지 체제 전환, 즉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대안으로 내거는 투쟁을 결의했다. 에너지 체제 전환은 에너지원의 전환과 함께 생태적 한계 내로 에너지 생산량 축소,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희생과 피해를 전가해온 생산방식의 전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조변혁을 뜻한다. 고용위기에 처한 발전노동자와 난개발에 맞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의롭고 신속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대중적으로 조직하는 투쟁을 시작하고자 한다.

대통령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을 비판하고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 건설을 토대로 한 기후정의동맹은 변혁적 전환을 목표로 구조 개혁적인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주장한다. 이 조직은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정치적 입장보다는 왼쪽에서 있으면서 주류 정당과의 협력 및 타협보다는 그들의 입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변혁적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환 주체의 세력화가 중요하다. 핵심 쟁점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약자 층을 결합시킨다고 해서 전환 주체가 실질적인 힘을 지닐 수 있

느냐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병렬적 연대나 유기적 연대인가라는 쟁점이고 이 논쟁의 핵심은 노동계급의 주도성 여부이다. 역사유물론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계급관계에 기초하고 있기에 역사의 추동력으로서 노동계급의 물질적 힘은 사회운동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계급이 지닌 물질적 힘과 사회경제적 약자 층이 어떠한 위상으로 결합하고 연대하는 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2> 참조). 이 유형화는 이해당사자 집단이 어느 정도로 정의로운 전환의 이상형에 가까운가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표-2〉 2022년 한국 정의로운 전환의 유형

구분							
현상유지	점점	관리형 개혁	점점	구조개혁	점점	변혁	혁명
자본주의		민주당 주류 환경단체		진보적인 정당 노동조합 기후위기비상행동		노동당 기후정의 동맹	사회주의
	← ↑			← ↑		← ↑	

4.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쟁점

진보 진영의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쟁점은 「경향신문」이 제시한 정의로운 전환과 민주노총이 제시한 산업별 노동조합 및 녹색단협

운동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들이 제시한 사안이 사회운동에 이데올로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이 계급투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2021년 6월 10일 「경향신문」은 “노동자는 모두 다르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더 불리한 업무환경에 놓일 수 있고 국적에 따라 차별받을 수 있으며, 고용형태에 따라 맞닥뜨리는 문제가 다를 수 있다. 개별 노동자가 처한 상황은 이렇게 다양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이 다양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노동자는 균일하지 않다. 국적·성별·지역 차이 존재하는데 ‘균일한 집단’으로 노동자를 묶으면 모두에게 정의로운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한다.

이러한 관점은 노동계급 내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갈래의 노동계급을 구분하거나 갈라 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무기 계약직, 여성, 이주 노동자 등을 강조하는 정체성에 기초한 노동자 특성은 노동계급의 단결을 약화시킨다. 사회적 ‘을’의 입장을 부각한 심정적 동의 기반은 정규직 노동자들도 기후 위기의 잠재적 가해자이고 정규직이 거려하는 일을 비정규직에게 전가한다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킨다. 이러한 입장은 정규직의 임금 인상 투쟁과 기후 운동의 결합을 촉구하기 보다는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심, 노동 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작업에 일조한다. 결국 자본과 국가가 주도적으로 형성한 생산관계인 노동계급과 자본계급 간의 관계는 희석되면서 노동계급 내 갈등과 억압 받는 이들 간의 다툼으로 계급 문제를 왜곡시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국내인과 이주인 등을 구분은 노동계급의 보편성을 간과하는 방식으로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 보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회구조 내에서 노동계급이 지닌 집단적 및

물질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파편화로 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시 말하면 노동계급 내 특수성 및 정체성의 강조는 계급 내 분열의 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노동계급은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 노동계급이 지닌 자본주의 내 물질적 이해관계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단결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계급 내 특수성 및 차이를 담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 계급 내 특수성의 강조는 노동시장 분절론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전제를 수용한 것이다. 2021년 6월 1일 「경향신문」은 1면 헤드라인에서 노골적으로 “연대보다 내 것 먼저,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기사가 수용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은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분절했다고 가정한다. 한편에는 고용 안정, 나은 노동조건, 산업재해로부터 다소 벗어난 고임금, 승진 등을 지닌 노동시장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는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산업재해에 노출된 저임금, 승진 기회가 없는 노동시장으로 나뉜다는 이런 전제는 서로 다른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이 연대 및 단결하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정규직의 기득권이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일정정도 가해자라는 주장은 자본가와 정부의 책임을 흐리면서 적대적 계급 분절선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낸다.

다음으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창근(2021)⁴⁾은 노동조합운동의 기후위기 대응에서 장애물 중 하나로 기업별 노조를 지적한

⁴⁾ “정의로운 전환의 구조적 제약과 현실화를 위한 노동정책 방향”에서 그는 노동조합 과제로 네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로 초기업교섭 촉진, 노조 민주주의 강화, 조합원 교육훈련, 지역사회 및 전국단위 사회운동과의 일상적 연대 강조 등이고, 둘째로 초기업노조-초기업교섭은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적인 노동조합 조직형태이자 교섭구조라는 점에 대한 조직적 동의가 필요하며, 세 번째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작은 작업장·플랫폼 등 불안정·취약노동자의 처지 개선에 주목해야 하며, 네 번째로는 작업장 수준의 녹색단협 체결 등 다양한 기후위기대응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산업별 단협을 제시한다. 그는 산업별 노조에 서 기후위기를 대응한다면 정규직 노조의 기후위기 회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산업별 노조가 어떤 측면에서 기업 노조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산업별의 강조가 노동조합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기 보다는 산업별 노조 및 단체협상의 환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산업별 노조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활동을 중요하게 파악한다는 점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역할은 교섭에만 있지 않다. 노동조합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 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으로 경제적 사안을 정치적 투쟁을 고무시킬 수 있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민주노총의 간부 및 관료는 노조의 역할을 사업장의 경제적 교섭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노동조합 관료주의 및 개혁주의에서 비롯된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노사정협의 및 노정협의나 산별노조로 형성된 것이 아닌 조직된 노동계급의 저항으로 가능했다. “스웨덴 복지체제, 출발점에는 노동자의 핏자국이 있었다”(성현석 2008.10.15.).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노조라고 자부하는 잘 조직화된 노조의 힘이었다”(세예르스테드, 프랜시스. 유창훈 역 2015, 156).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력은 협상이 아니라 계급투쟁에서 나온다는 역사적 사실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에도 적용된다.

2022년 6월 21일,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기후정의, 단협으로 쟁취하는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요구하는 “녹색단협운동 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 진행했다.

산업의 녹색화, 공정 전반의 녹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 이러한 전환은 결국 노동자 일자리의 질과 양 모두에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성에는 일자리도 없다(There are no jobs on a dead planet.)’**라는 말이 웅변하는 것처럼 이제 노동자의 일자리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노조 활동 중의 하나인 단체교섭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 핵심 의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에 기후정의가, 정의로운 전환이** 당당히 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노동자들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을 통해 많은 것을 바꾸어 왔습니다. 사업장을 바꾸고, 산업을 바꾸고, 한국 사회를 바꾸어 왔습니다. 더 민주적이고 더 평등하며 보다 많은 이들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제 **기후와 일자리를 지키고 지구를 살려내는 기후정의를 녹색 단체협약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동자들이 나섭니다 … 민주노총의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요구, 노동법 전면 개정 요구가 기후정의 요구, 노동 중심 산업 전환 요구와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녹색단협운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 멀고 무거운 과제가 아니라 내 사업장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고, 구체적 쟁취 과제 제시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성과들을 쌓아나가는 체계적 노조 활동으로**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요구들이 **녹색 단협으로 모여 다시금 사업장은 물론 해당 산업 전체를, 그리고 한국 사회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 민주노총의 녹색단협운동은 노동권과 기후정의를 함께 외치는 모든 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기후정의, 단협으로 쟁취하는 노동중심 산업전환! 녹색 단체협약, 녹색 노조 활동으로, 기후정의 실현에 노동자가, 민주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녹색 단체협약으로 정의로운 전환 쟁취하자! 노동자가 앞장서서 기후정의 실현하자!(강조 인용자)**

민주노총의 녹색 단협운동은 국제적인 노조 연합체인 국제노총(ITUC)이 주최한 6월 22일 “기후와 고용, 우리 일자리를 지키는 국제

공동행동의 날 캠페인(Global Day of Action to Climate and Employment Proof Our Work)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의 첫 행보가 기후위기로 인해 고통을 받은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행동이 아니라 단체협상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관료적 정치를 보여준 것이다. 기후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 고통을 감내하는 노동자의 고용 보장 및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을 모아내는 작업이 기후위기의 실질적 해결책이다. 민주노총이 협상과 협의에 의존하는 정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조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은 계급투쟁과 무관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려면 노동자, 지역사회, 일반대중으로의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는 에너지 민주주의가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 2013).

신속하고 과감한 정의로운 전환은 기존 정치 및 경제 권력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은 기업과 자본의 이해관계를 비호해주는 국가 권력을 제압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그동안 진행된 산업 구조조정의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기존 계급 관계를 도전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계급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협상과 대화로 덮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두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 측면은 사회적 대화의 장을 내세우는 방식인 계급 협조 (천연가스 친환경, 전기 요금 인상, 탄소세 도입, 정규직의 임금 양보, 사회연대 전략, 전기차 같은 미래 산업 투자 촉진 등)이고 다른 측면은 계급투쟁 (노동자의 일자리 조건 향상과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투쟁 = 아래로부터의 노동계급의 대중투쟁, 기후정의=노

동정의)이다.

2021년 12월 집회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인용자) 폐쇄를 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꼭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지구 지켜야 합니다. … (기후위기로) 많은 생물과 많은 동물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저도 죽어갈 수 있습니다. … 발전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잃을 수 있고 자기 삶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시오.

이러한 노동자의 목소리는 기후위기 운동과 일자리 지키는 노동운동의 대립이 아니라 상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두 운동의 분열이 아니라 단결 및 연대해야 한다는 점이 계급적 입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운동의 결집력을 높일 수 있다. “정부 식 탄소 중립이 아닌 일자리 창출 제로 반대”, “이윤을 위한 전기차(확대)가 아닌 무노조화 반대” 등의 요구는 기후 투쟁이 경제 영역의 투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호이다. 계급투쟁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희석시키는 Don't Look UP에서 벗어난 Look Up 운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5.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은 현재 진행형

『사회주의자』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기층 노동자의 목소리를

간과한 채 상층 노조 간부와 핵심 기후 활동가의 주장만을 반영해서 일면적으로 비판한다.

실제로 '정의로운 전환'은 기존 계급 질서를 그대로 둔 채 노동자나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호소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프레시안에 실린 2020년 8월 3일자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의 글 「문 정부 그린뉴딜에 정의로운 전환은 없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린뉴딜은 기업들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린뉴딜 다시쓰기”가 필요하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한다. 2020년 10월 16일자 민주노총 기후위기 대응 네트워크의 논평 「노동자, 지역주민이 함께 해야 전환은 가능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판하면서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원도 사회적으로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민도 정보를 취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은 이해 관계자의 민주적 참여에서 시작된다” 등을 말했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정의로운 전환은 정책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개진 보장 정도를 주장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미 지금도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 의견 수렴 과정을 두고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그것을 지지하는 쪽에서조차 이런 기존 제도와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황정규 2021.04.21).

현재 주되게 논의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 의견 수렴 차원, 협치 구조의 참여 등을 요구하는 개혁주의 차원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노동계급의 투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요구사 안도 급진화 될 가능성이 있다. 정의로운 전환이 처음부터 개혁적인

단어거나 현재의 시점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수준을 재단해서 관망하는 자세보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기초한 운동이 급진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투쟁에 결합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2022년 9월 24일 기후정의행동의 날, 폐쇄 예정인 태안화력발전소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들(발전노조태안지부, 금화PSC태안지회, 한산태안발전지부, KPS비정규직발전노조태안지회, 한국발전기술태안지회, 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 선언”을 진행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전소노동자가 수년에서 수십 년 몸담았던 석탄화력발전소는 직장을 넘어 삶 그 자체이다. 그러나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석탄발전소 폐쇄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74%의 노동자가 ‘고용만 보장된다면 다니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의 이런 자기희생적인 충정과는 다르게 정부는 석탄발전소 폐쇄로 발생하는 노동자 해고 등의 문제에 대해 거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책이라고 내놓은 건 재취업 알선이나 실효성 없는 교육이 전부다. 지난 보령1·2호기(2020년), 호남1·2호기(2022년), 울산4·5·6호기(2022년)가 폐쇄되면서 58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 대부분은 2차 하청노동자들이다. 해고되지 않고 재배치된 노동자들의 처지도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강도가 늘어난 경우가 태반이다. 이러한 일방적 희생은 즉각 시정돼야 하고, 재발방지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더욱이 석탄발전소 폐쇄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 충고용 보장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석탄발전소의 현실이 열악하며 이러

한 노동 조건은 이들이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형성하며 이들의 요구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노동자 희생을 전제로 한 산업구조조정 은 자본계급에서 유리한 국면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은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계급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전력산업은 화석연료 사용이 중단되고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간주도로 이뤄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매우 우려스럽다. 2021년 12월까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55건, 13.7GW이지만 이 중 대부분이 맥쿼리 등 외국인간자본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 민간주도의 전력산업은 자본에겐 친문학적인 이윤을 안겨주지만 노동자민중에게겐 공급 불안정과 요금폭탄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전이 상반기에만 14조 넘게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민간발전소는 역대급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민간주도의 전력산업이 어떨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기후위기마저도 돈벌이 도구로 여기는 자본의 횡포를 막지 못하면 재앙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고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공공적 재생에너지로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모든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면, 노동자 고용보장과 에너지의 공공적 성격 모두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대안으로 제시되는 재생에너지가 민간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공 기관을 통해 확대되기를 원한다. 노동자의 착취와 자연 수탈이 민간 기업에서 더 강화되기 때문에 공기업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자의 고용 보장, 노동 조건 개선, 공공재로서의 발전 기능의 강화 등을 요구한다.

하나,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모든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하나, 전환된 일자리는 임금 저하와 노동강도 강화 등 노동조건 저하가 없어야 한다! 하나,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은밀한 민영화'를 비롯한 모든 민영화를 중단하라! 하나, 6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라! 하나, 민간주도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기업을 건설하라!

현장 노동자의 요구는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24일 기후정의행동은 발전 노동자들의 집회로 이어졌다. 2022년 10월 22일 한국발전산업노조와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는 “정의로운 전환을 발전노동자의 공동투쟁으로 이뤄내자”라는 취지의 발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윤을 위한 에너지 체제는 발전노동자와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기에 공격적 민주적 생태적 에너지 체제전환을 위해, 기후정의동맹이 발전 노동자 동지들과 연대했다. 이곳에 모인 발전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라 고용보장위원회를 설치하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발전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일이다. 노동자가 참여하는 고용보장위원회 설치로 발전노동자 고용, 승계 보장을 위해 발전노동자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에너지 산업 전환 관련 총괄적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개인 동의하에 발전소 노동자 등록제 도입을 통해 선고용-후교육 도입, 이주 주거 대책, 교육 지원 방안 등 발전소 폐쇄에 따른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은 자본의 축적구조 체제와는 역행하는 일이

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환의 요구는 판돈이 커질 수밖에 없는 계급투쟁의 장이 되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 운동의 결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 민주노총연맹 등이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기후운동 세력을 모아내야 한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노동계급의 전체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계급투쟁을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지름길이다.

(2022년 9월 7일 접수, 10월 24일 심사완료, 11월 10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09.2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2.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노동 전환의 주요 정책과제』.
-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노동자 사업주 소상공인 및 자치단체 지원방안)」. 2018.06.
- 고용정책총괄과 부처합동.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2021.7.22,
- 김종진. 2021. “기후위기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지속가능한 규칙과 노동시장 현황”. 『KLSL ISSUE PAPER』제158호.
- 김한솔. “기후위기 시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3):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 「경향신문」. 2021.06.10.
- 남재욱 외. 2021. 『탈탄소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녹색단협운동 선포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기후정의, 단협으로 쟁취하는 노동중심 산업전환」. 2022.06.21.
- 발전노조태안지부·금화PSC태안지회·한산태안발전지부·KPS비정규직발전노조태안지회·한국발전기술태안지회·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공동 선언문」. 2022.09.24
- 산업통상자원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 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2021.
- 성현석. “‘착한 정부’는 ‘코뮌’에서 나온다”. 「프레시안」. 2008.10.15.

- 세예르스테드, 프랜시스. 유창훈 역. 2015. 『사회민주주의의 시대』. 파주: 글항아리.
- 손광목. “정부의 ‘공정한 노동전환’? 노동계 반응 엿갈려”. 「참여와혁신」. 2021.07.22.
- 스넬, 다린 · 페어브러더, 피터. 2019. “오스트레일리아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자 환경주의”. 레첼, 노라 · 우젤, 데이비드 역음. 김현우 역. 『녹색 노동조합은 가능하다』. 서울: 이매진.
- 이상헌. 2020.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 『공간과사회』. 30(1). 79-117.
- 이창근. 2021. “‘정의로운 전환’의 구조적 제약과 현실화를 위한 노동정책 방향: 노사관계론적 접근”. 이창근 · 김선철 · 류승민 · 탁선호. 『기후위기와 노동』. 민주노동연구원.
- 정대연. “‘연대보다 내 것 먼저’, 현실에 무릎 꿇은 정규직”. 「경향신문」. 2021.06.01.
- 정의로운전환연구단. 2022. 『한국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 전략 그리고 과제』. 2022.04.
- 정흥준 · 김주희 · 채준호. 2021.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해외사례를 통해 본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발전산업노조 · 발전비정규노조 전체대표자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발전노동자의 공동투쟁으로 이뤄내자 라는 취지의 발전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선언문」. 2022.10.22.
- 황정규. “정의로운 전환, 기후운동판 ‘노동존중’을 넘어설 수 없다”. 『사회주의자』. 2021.04.21.
- 기후위기비상행동 <http://climate-strike.kr/demand/>(검색일: 2022.09.05)
- 인권운동사랑방 www.sarangbang.or.kr/writing/74381(검색일: 2022.09.0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검색일: 2022.09.01)

- 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 2013. *Resist, Reclaim, Restructure: Unions and the Struggle for Energy Democracy*.
- Foster, John Bellamy. "Ecosocialism and a just transition". www.rebelnews.ie/2019/06/21/3287/#easy-footnote-5-3287 (검색일: 2022.10.15)
- Just Transition Research Collaborative. 2018. *Mapping Just Transition(s) to a Low-Carbon World*.

Class struggle for a just transition in South Korea

*Minjung Kim**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ent of a just transition being discussed in the era of the climate crisis and how the Moon Jae-in government and businesses are using the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Through this analysis, the ideological competition surrounding a just transition in South Korea in 2022 will be analyzed in detail. The discussion on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is a real issue centered on coal-fired power plants. With this in mind, we identify the core of the Moon administration's fair transition, and then explain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a just transition claimed by the trade unions and the reform-oriented media who criticized the Moon administration's policies. Through this, the various contents of the just transformation presented by each subject are analyzed politically. Lastly, what i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a just transformation is proposed from the level of social movement theory.

* Lecturer, Department of Urban Sociology, University of Seoul

Key word: climate crisis, just transition, Moon Jae-in government's just transition, class struggle

